

##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이렇게 되고 있다 !

일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철저한 성과위주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비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금융의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일본 대지진 이후 경제적 손실액이 15조엔(GDP대비 약 3%)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①원전피해 ②전력장애 ③소비심리 등에 따라 경제 영향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과거부터 철저한 성과위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국제금융센터, 2011.3.23.)

- 실제 일본 정책금융기관은 일본의 고도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예산의 비효율 및 재정부담으로 인해 2007년에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8개 기관을 통합, 폐지 및 민영화하여 1개 기관으로 축소하여 운영 중이며, 조직 개혁 후에도 대출규모 축소, 점포 통폐합 등 경영 합리화,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표 1〉 일본 중소기업 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엔, %)

	2003	2005	2007	2008
민간금융기관 <sup>1</sup>	231.5(89.6)	228.6(90.1)	237.1(91.4)	236.5(91.7)
도시, 지역은행 등	180.5(69.2)	177.7(70.1)	185.3(71.4)	184.0(71.4)
신용금융기관	신용 금고	41.8(16.2)	41.5(16.4)	42.3(16.3)
	신용 조합	9.2(3.6)	9.3(3.7)	9.5(3.7)
정책금융기관	26.8(10.4)	24.9(9.8)	22.3(8.6)	21.3(8.3)
국민정책금융공고	9.2(3.6)	8.2(3.2)	7.0(2.7)	6.7(2.6)
중소기업정책금융공고	7.6(2.9)	7.2(2.8)	6.0(2.3)	5.5(2.1)
상공조합중앙금고	10.0(3.9)	9.5(3.7)	9.3(3.6)	9.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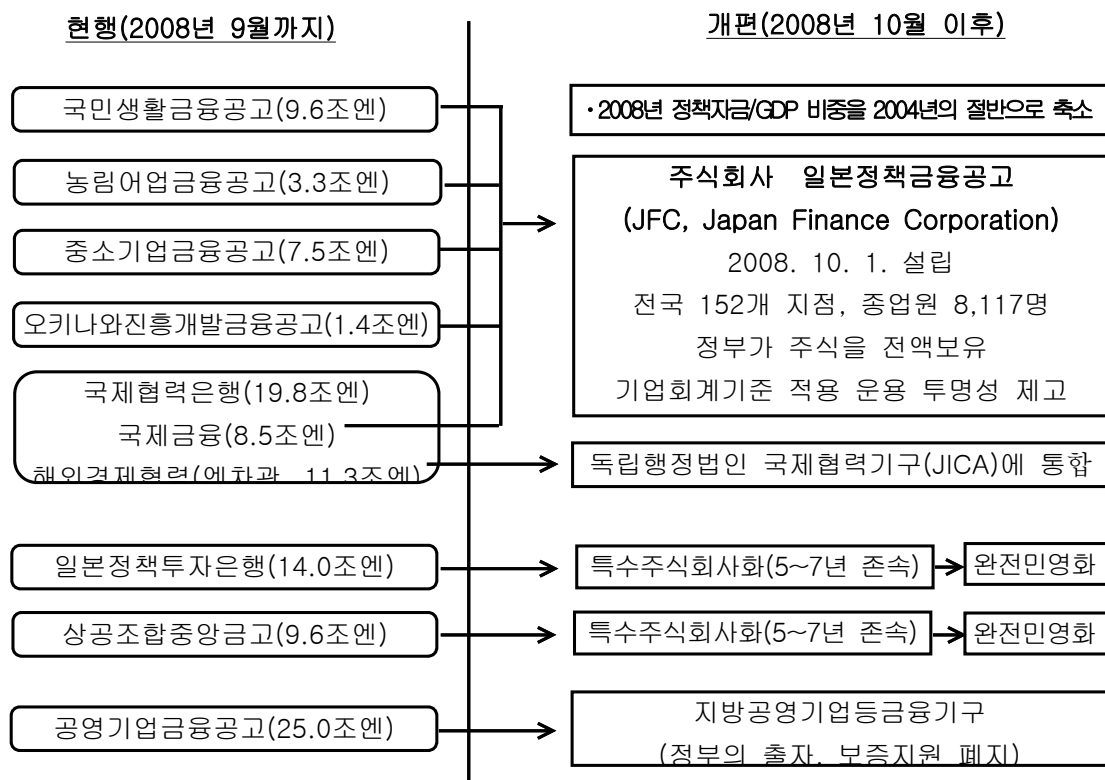
주: 1) 신탁계정제외. ( )은 신용보증을 제외한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각 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일본 중소기업백서(2009년판), 일본 중소기업청 및 일본 신용보증협회 연차보고서(2008), 일본 신용보증협회.  
[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1/h21\\_1/Hakusyo\\_fuzokutokei\\_web.pdf](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1/h21_1/Hakusyo_fuzokutokei_web.pdf).

- 이로 인해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정부의 출연금 및 재정투융자를 재원으로 하여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국민생활금융공고는 2008년 10월 ‘일본정책금융공고(정부계 특수법인)’로 통합됨.
- 이로써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관별로 정책금융을 보면, 간접금융에는 정부계 중소기업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융자, 지역 경제산업국과 같은 타 부처의 기관이 행하는 융자, 설비 근대화자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행하는 융자,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 및 동경 특별구 등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제도융자’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이나 제3섹터를 통한 융자 등이 있음.

□ 한편,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종류로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완제도로 양분되는데 여기서 정책자금부문을 보면, ①Safety Net 대출은 중장기적으로 경영안정이 전망되는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 유통에 곤란을 겪을 때 지원하는 융자방식의 운전자금임, ②기업재건자금제도는 경영개선이나 경영재건 등이 필요하고 기업재건계획에 따라 기업재건이 전망되지

만 통상의 융자제도로는 대출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함, ③사업재생지원자금제도(DIP Finance)는 민사재생법 등에 의  
 한 법적 재건 수속이나 사적 정리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재건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한 대출. 대  
 출한도액은 7억2천만 엔, 대출기간은 용도에 따라 5~15년 이내  
 이며 원칙적으로 담보와 대표자 보증이 필요하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사업전망을 고려한 일부를 면제하는 특례 존재, ④신창업  
 융자제도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입보 불요)에게 융자 실시, ⑤기업도전지원  
 무담보대출제도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등에 의한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무담보로 융자로서 신규성이 인  
 정되며, 채무가 과다하지 않고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이 예상  
 되는 기업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은 3천만 엔, 대출기간은 5년으  
 로 담보 없이 대표자 보증으로 융자함.

<그림 1>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조직 개편도



자료: <http://www.mof.go.jp/jouhou/seisakukinyu/kaikakukeii.htm>.

□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운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의 신청에서 심사, 계약, 자금지원 등의 모든 절차를 전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간접대출의 경우도 정책자금을 폭넓게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도시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을 대리대출기관으로 정하여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임.
- 다음으로, 일본은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지원기관이 지방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금융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음.
- 셋째,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담보 및 보증인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담보 및 보증인 대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정책목적이나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음.
- 넷째,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전체 대출 가운데 특수목적 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수목적(신사업, 환경, 경영혁신)의 장기(최장 20년)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융자뿐만 아니라 기업 진단 컨설팅, 마케팅 등을 포함한 종합연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차별화하고 있음.